

문 대통령 '신베를린 선언' 1년... 우려 딛고 진척 성과

한반도 평화 구상... '4대 제안' 모두 실현

북한 ICBM 발사 직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지 지난 6일 1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에서 베를린 코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신베를린 선언은 당시 부정적 전망과 우려를 딛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나와 큰 기대를 받지 못했다. 2000년 3월 9일 유럽 순방 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발표됐고, 곧바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해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 14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다"고 강경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직후 이뤄진 신베를린 선언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다양한 구상을 담았다. ▲한반도 평화추구(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 통일 불추구) ▲한반도 비핵

화 추구(완전한 북핵 폐기,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우려 해소, 북미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남북 합의 법제화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한반도 신경재구상 추진(북핵문제 진전 및 여건 조성 시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형성)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이산가족 문제 해결, 재해 공동대응, 민간지역간 교류 지원, 북한인권 개선 노력, 인도적 협력 확대) 등 다섯가지다.

다섯가지 구상 가운데 신경재구상을 제외한 분야는 대부분 실현됐다. 지난 4월과 5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무력 사용 금지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 합의 결과는 지난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신베를린 구상이 발전하는 성과를 얻었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의제의 경우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태권도시범단 상호 방문 등으로 실현됐다.

한반도 신경재구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단계부터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북은 이달 또는 다음달 이내에 철도·도로 관련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지 6일 1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계기로 베를린 코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시청 비어 홀에서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공동 참가·이산가족 상호 불가침·남북대화 재개 이뤄져 북비핵화 후속조치 관건... 올 가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예정

한편 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밝힌 '4대 제안'이 모두 현실화된 점은 큰 성과다. 문 대통령은 코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 4대 제안을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창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은 그대로 구현됐다. 평창올림픽 개최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어졌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다. 지난 3일 남북은 8·15 광

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우리 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의 명단이 담긴 의뢰서를 교환했다. 남측은 오는 25일까지 생사확인서류 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다음달 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적대행위 상호 중단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지난 5월 1일 군사분계선 확성기가 철거되고 진단살포도 중지됐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추가 긴장 완화 방안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

남북대화 재개 의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두차례 가졌다.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해 후속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초대할 만큼 러시아에서의 남북 정상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베를린 선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같은 흐름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숙제 또한 남아있다. 신베를린 선언 1년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북한의 국제사회 대화 노력 및 인권 문제 해결 등도 남은 과제로 제기된다. /뉴시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20일 한날에 구형·선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구형,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한날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특검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소심 4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인 이달 2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 변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심은 검찰의 항소로 열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운)에 자신의 명의로 항소포기서를 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공고포기에도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검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을 신뢰한 국민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러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고 했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난민법 제정' 국민청원 63만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6일 역대 최대 참여인 63만1922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난민 현안에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어 국민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원 게시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 활성화를 일회한 한 달 무비자 입국 제도와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기존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는 13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답을 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뉴시스

참여연대, 청와대·대법원·경찰청 등 '특활비' 공개청구

권익위·법무부 등 포함 8개 정부기관 대상 2015~2018 특활비 지출내역 요구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도 특활비 내역 확보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청구 대상은 경찰청, 국무조정

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상대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가 상임위원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지급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정부기관의 34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운영)기본경비, 업무지원비, 운영비 등에 편성된 예산이 실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총 64개의 사업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3216억 4600만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에서 이 중 약 294억 800만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이 특활비를 편성하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결과 확인 후 2019년 예산편성 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타 비목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8대 부산군의회 의원 및 원구성 현황

이한수
의장

장은아
부위원장 / 자치행정위원장

이강세
의회의운영위원장 / 자치행정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위원장

오광환
산업건설위원장

군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 의회

군민의 행복과

부안의 미래를 위해 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태근
의회의운영위원장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기
자치행정위원장 / 의회의운영위원장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 / 의회의운영위원장

문찬기
자치행정위원 / 의회의운영위원

이용님
산업건설위원

부산중영의회